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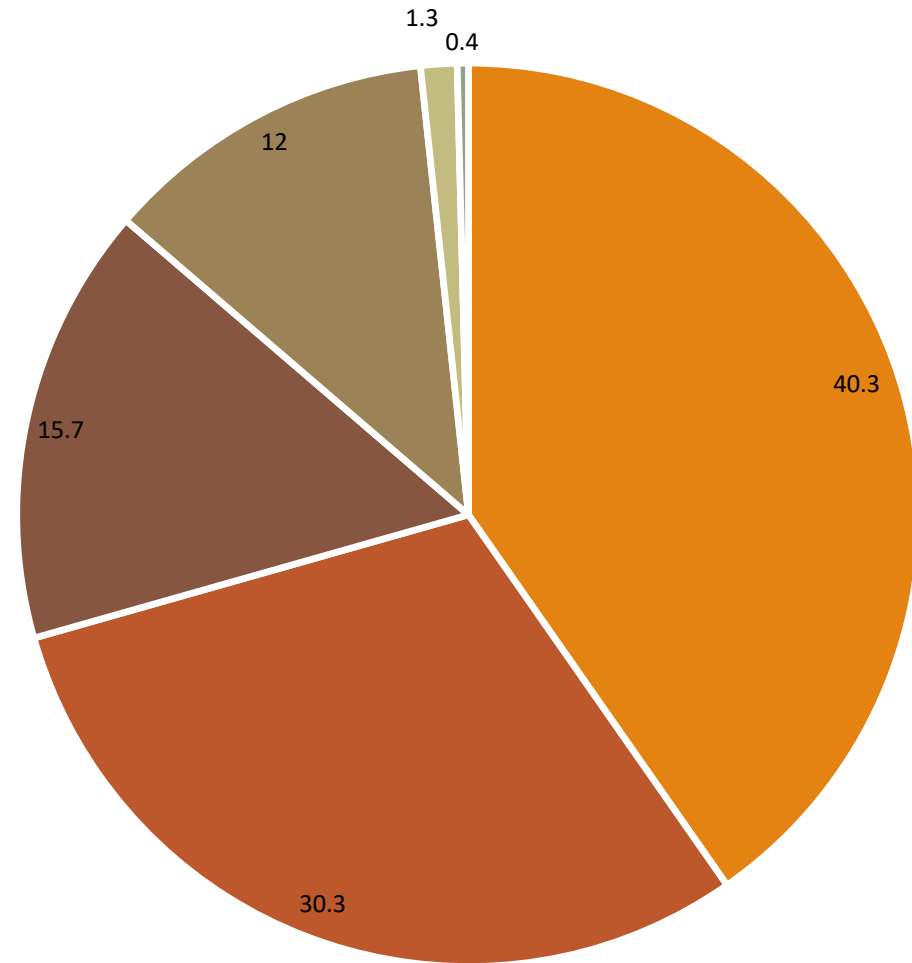
ESG 규제 및 비판

ESG 공시와 평가
정주렴교수

* 본 강의는 사회적가치연구원(www.cses.re.kr)의 2023년 사회적가치 강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소정의 강의개발비를 지원받은 과목입니다.

2023 올해 기업의 가장 큰 ESG 이슈는?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서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2023.2)
- ESG 공급망 실사법 및 ESG
의무공시가 70%를 차지
- 기타 순환경제 구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8%



■ 공급망 실사 ■ ESG 의무공시 ■ 순환경제 구축 ■ 탄소 국경 조정제도 ■ 식물다양성 대응 ■ ESG 워싱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3/2/6

기업의 준비는 아직 미흡

<표1> EU발 공급망 ESG 실사법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구분	[실사 이전 단계] 실사 시스템 구축	[본격 실사 단계] 온라인/현장 실사	[실사 후 피드백 단계] 실사 후 개선조치 요구	별도 조치 없음
원청기업	24.9%	14.5%	12.4%	48.2%

구분	대응 조직 구성	진단/평가 시행	진단/평가 후 컨설팅 시행	별도 조치 없음
협력업체	13.7%	26.2%	13.1%	47.0%

- ✓ 'ESG 의무공시'와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공시 의무화에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달함.
- ✓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의 국내 도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71.7%가 “국내 실정에 맞춰 일부 수정 및 점진적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

각 항목별 중점 분야

<표3> 올해 ESG가 지난해에 비해 중요해질까요?

매우 중요해질 것	다소 중요해질 것	비슷할 것	다소 줄어듦	매우 줄어듦
18.3%	43.3%	36.0%	2.0%	0.4%

<표2> 올해 ESG 각 분야별 현안

구분	친환경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보	탄소국경조정제도	순환경제 구축	생물다양성 대응
E	34.0%	24.0%	21.3%	18.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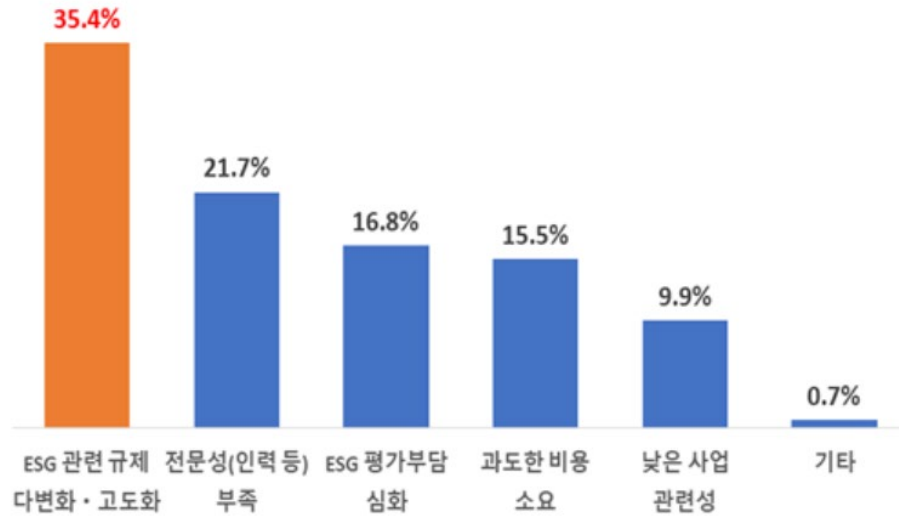
구분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	고용/인권	지역사회 관계	소비자보호	다양성
S	52.3%	20.0%	14.7%	7.3%	3.7%	2.0%

구분	이사회 및 감사기구 강화	준법경영	반부패·윤리경영	공정경쟁	소액주주 권리 강화
G	30.3%	28.0%	24.3%	13.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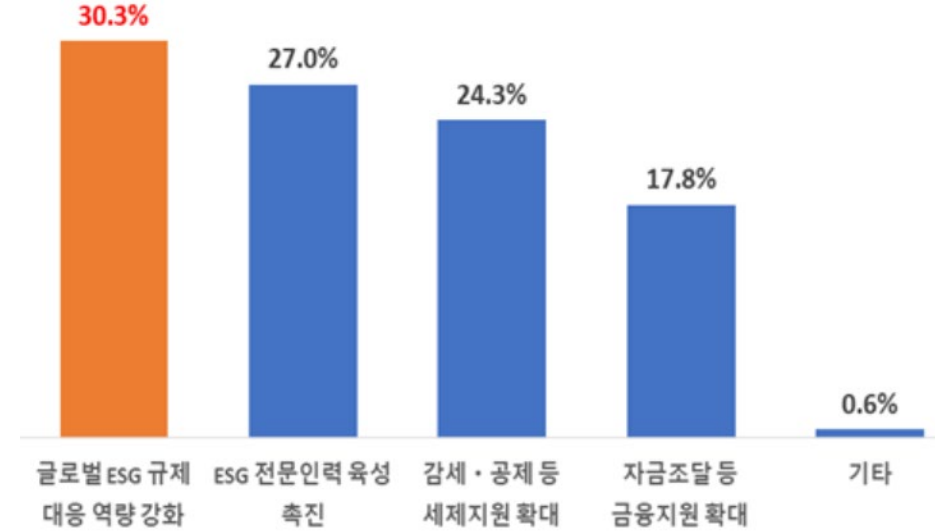
- ✓ 60% 이상이 ESG가 작년 대비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답함.
- ✓ 중요도가 줄어듦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4%에 불과

- 전경련 300대 기업 조사 (2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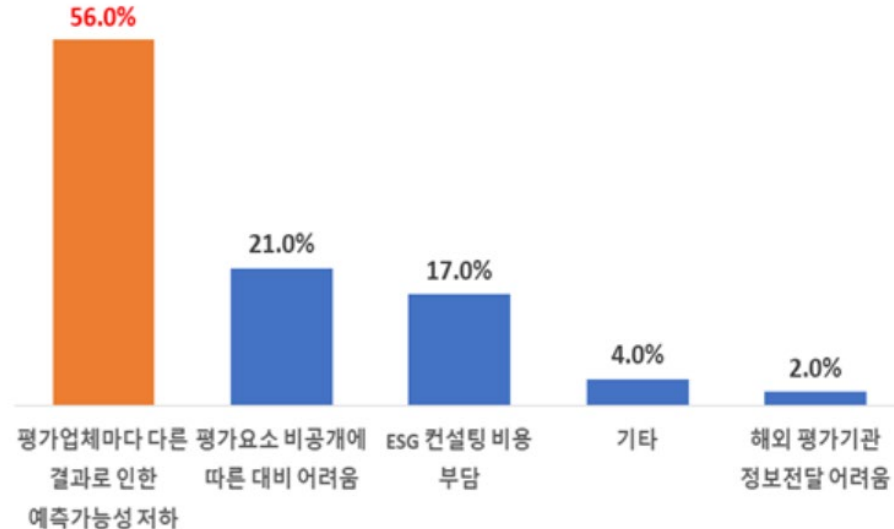
〈 ESG경영 추진 애로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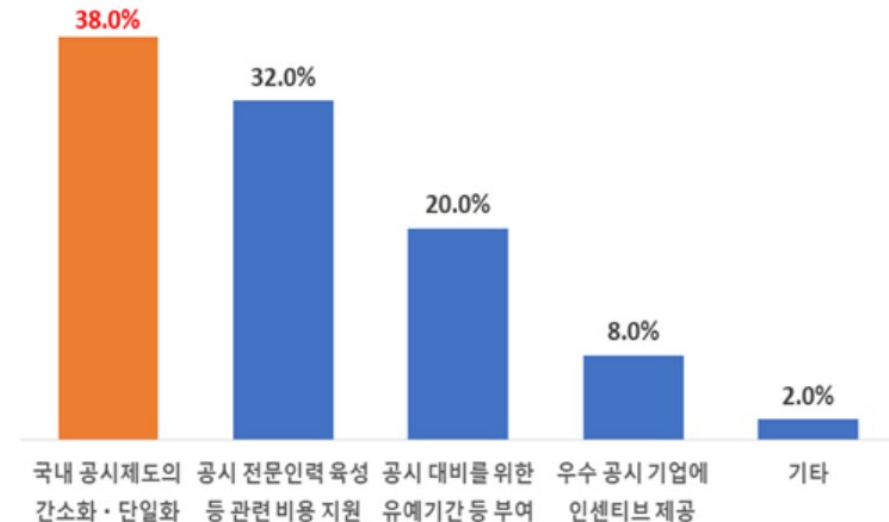
〈 정부 · 국회 중점 추진 정책 〉



〈 ESG 평가 대응 관련 어려움 〉



〈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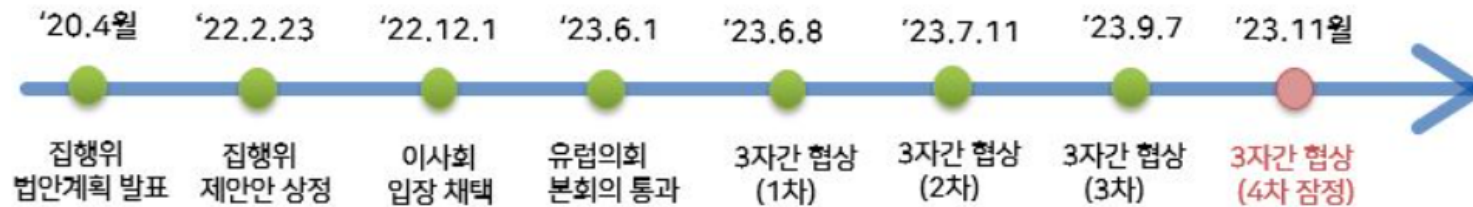


공급망 실사 규제

공급망 실사 규제 – EU 공급망 실사 제도 (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 공급망 전체의 환경, 인권 등의 실사 의무화
- 2023. 9 현재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입법 진행중
- 공급망 실사 제도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규제 수준이 상이하므로 유럽 전반의 공통 규제를 수립하여 상이한 제도를 일원화
- 2021 결의안 채택, 2024년부터 시행 예정 발표. 대기업을 2년 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 계획

<EU 공급망 실사법 입법 추진 경과>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구성]

EU 공급망 실사 제도 - 실사 절차



- ✓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내 자국법 제정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3~5년 내 적용해야 함.
- ✓ 제재는 회원국별 자율 결정: 과징금 및 행정제재, 민사책임 부과 허용, 공공조달 입찰제한, 보조금 및 수출신용 제한
- ✓ 각 회사는 관련 규정 보유해야 함. 리스크 발생시에는 해당 내용과 대책 공개.

현재 승인 절차는 난행중이나, 여전히 대비 필요

- 2024.2.28 최종 타협안 승인을 위한 다수결 투표 무산
- 스웨덴 반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기권 표시 (총 27개국 중 13개국 기권, 1개 국가 반대 입장)
- 독일은 폭스바겐(자동차 제조), BASF(화학기업)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체 공급망 실사법 시행중으로 이중 규제 우려 및 독일 기업 경쟁력 우려
 - 독일 기권 이후 다른 국가들도 기업 로비 단체 등에서 반발
- 법안 승인이 6월로 미뤄질 가능성, 더 나아가 유럽의회 선거 후 폐기 관측 의견도 있음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재계의 화두를 넘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
- 올해 초부터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을 정식 발효, EU는 2024년부터 계획
 - 기업은 사내 실사 규정을 마련해 '원재료 확보→상품·서비스 제작→최종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을 점검해야 함
 - 기업은 실사를 통해 본사와 자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인권·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 필요
 - 독일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물론 독일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모든 회사가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 법을 위반하면 800만 유로(약 110억원) 혹은 연매출(글로벌 기준)의 최대 2%를 벌금이 부과
 -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
-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업과 같이 원재료, 가공, 세척 등 제품 공정이 복잡하고, 여러 협력업체가 엮인 업종에서는 대응 준비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내 기업 대비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의 업종별 대응이 중요할 것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등으로 업종간 대응책 구축 필요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명칭	업종	주요 활동	주요 참여 기업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자 자동차	인권, 안전, 환경, 윤리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 및 회원사 실사·평가	애플, 포드 등 213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6개
TfS (Together for Sustainability)	화학	가입에 별도 조건 필요, 노동과 인권, 안전, 환경, 지배구조 분야 공급망 실사 진행	헨켈, 바스프 등 40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0개
PSCI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바이오 의약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 환경, 관리 시스템 등 5개 항목으로 공급망 내 계약관리	화이자, AbbVie 등 71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1개
SAC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의류	지속가능성 표준화 측정 플랫폼인 히그(Higg)을 활용하여 패션업계 공급망 관리	나이키, 뉴발란스 등 283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0개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 Drive Sustainability – 유럽 완성차 기업 참여 이니셔티브. 공급망ESG 진단 지표·지침 개발, 회원사 국가별 ESG 리스크 정보 제공
- * Responsible Steel –철강산업 이니셔티브. 공급망 리스크 진단, 실사 및 인증활동 추진. 광물생산, 소재, 완성차기업 등도 가입
- *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 ICT 산업 ESG 경영 생태계 조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단체. 공급망ESG 지표 개발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 구성

구분	내용
기초진단	-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을 위해 필수 관리해야 하는 진단항목 - 산업 이니셔티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진단/실사 지표로 구성 - 12개 범주/25개 진단항목
심화진단	- 공급망 ESG 진단/실사 본격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진단항목 - 산업 이니셔티브에서 요구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종합하여 구성 - 18개 범주/60개 진단항목
추가진단	- 공급망 ESG 진단/실사 외 ESG 수준향상을 위한 진단항목 - 공급망 ESG 진단/실사 외 ESG 수준향상을 위한 진단항목 - 6개 진단항목
ESG 업무표준 매뉴얼	- 중소,중견기업이 ESG경영 도입을 위해 실무적으로 참고하는 매뉴얼 - 조직체계, 정보공시, 평가대응, 전략수집, 과제실행 등 절차 설명 - 8개 업무별 절차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 주요 진단항목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 (2022.12.발표)



1

정보공시

-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 ESG 정보공시 검증



2

환경(E)

- 환경경영 추진체계
- 대기 및 소음관리
-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



3

사회(S)

- 정규직 비율
- 인권정책 수립
- 안전보건 추진체계
-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



4

지배구조(G)

-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 공익제보자 보호
- 정보공개 투명성 등

[공급망 대응 K-ESG가이드라인.pdf](#) ← 중소·중견기업

[K-ESG 가이드라인.pdf](#) ← 대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권 vs 탄소세 vs 탄소국경세

- 배출권 거래제란?



<https://www.youtube.com/watch?v=jBPWUAOve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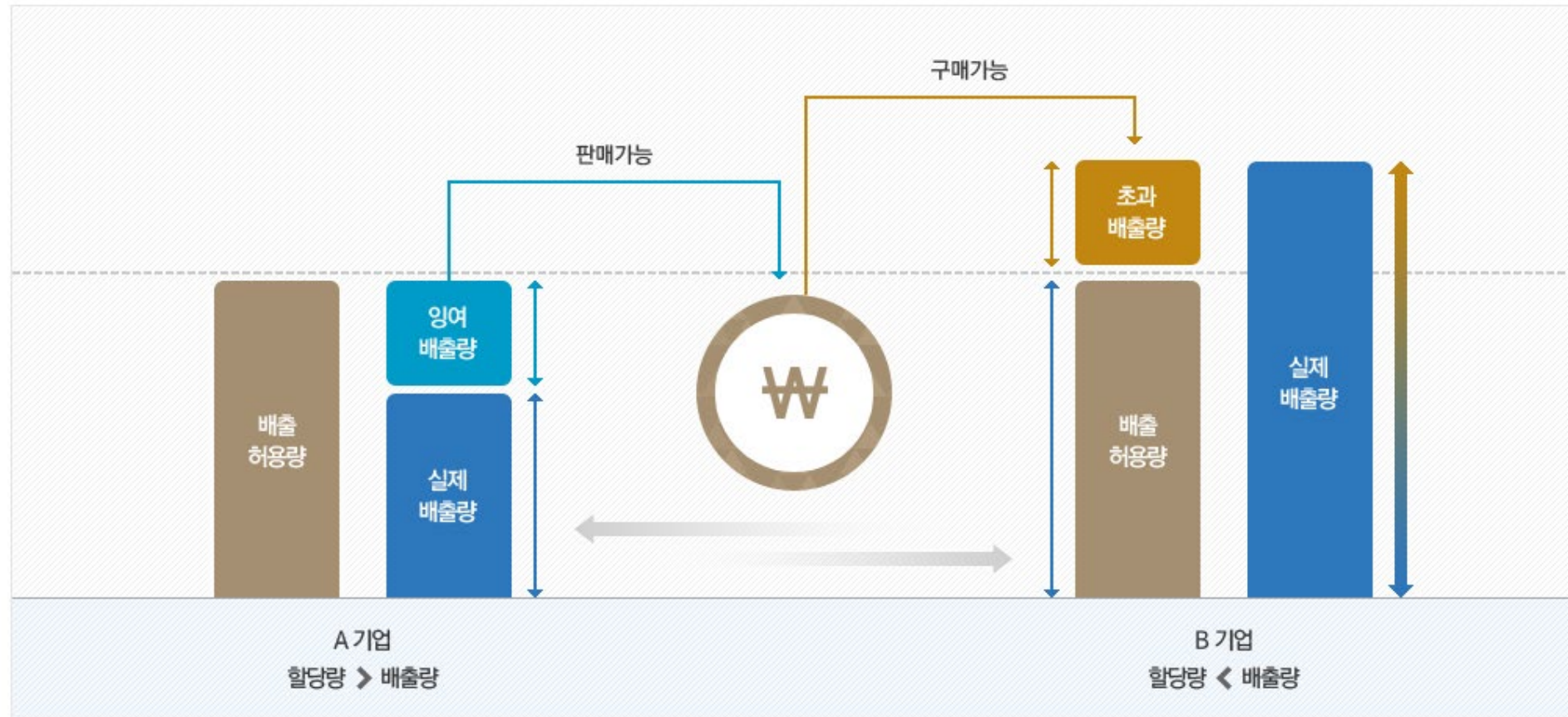
- 탄소배출권 vs 탄소세 vs 탄소국경세



<https://www.youtube.com/watch?v=SangLE4ex1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거래제 개념



-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 배출권의 할당 현황

1차 계획기간 (2015년~2017년)

· 할당대상업체

2015년	2016년	2017년
525개	564개	592개

* 권리의 무승계, 신규진입 등으로 인해 증가

· 할당량

* 최종 할당량 16억 86백만톤
(43.3백만톤 추가할당, 42.0백만톤 할당 취소)

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

· 할당대상업체

641개 업체
* '21.2.23일 지정 기준

· 할당량

사전 할당량 16억 43백만톤

· 경매(유상할당)

- 대상 :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
- 물량 : 2019년 7,949,500톤
2020년 8,171,400톤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 할당대상업체

684개 업체

· 할당량

사전할당량 29억 2백만톤

· 경매(유상할당)

- 대상 :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
- 물량 : 2021년 18,242,500톤

-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의 탄소배출권 12월물 선물(ICE ECX EUA) 가격은 8일 런던 거래소에서 톤당 52.17유로(약 7만원)로 마감. 1년 전 톤당 22.82유로에서 2배 이상(129% 상승)
- EU와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크레인셰어즈 글로벌 카본 ETF' 가격도 지난해 7월 말 상장 이후 10개월 만에 20.09달러에서 34.88달러로 74% 상승

→ 탄소배출권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은 지난해에만 20% 성장. 현재 2290억유로(약 311조원). EU 시장이 90%.

→ WHY? 탄소배출권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EU(유럽연합) 때문

→ EU는 최근 1990년 대비 40%로 설정했던 2030년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5%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대형 발전소나 철강 산업·광업 등 탄소 집약 산업 위주로 돼 있는 탄소배출권의 거래 범위를 해운업, 자동차 운수업, 일반 빌딩 난방 등으로 넓힐 것을 검토기로 함.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

→ 인도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의 재생에너지 자회사 주가는 지난 1년간 370% 상승했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인도 뭄바이에 태양광 발전소를 차려놓고 배출권 창출 사업을 해왔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도 지난해 탄소배출권 판매로만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 매출을 올렸다. 한국에선 휴켄스, 한솔홈데코 등이 탄소배출권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배출권 연간 거래액 '1000조 시대'

기업들은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 다음 연도로 차입하거나 이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배출권이 필요하기도 하고 과징금 문제도 있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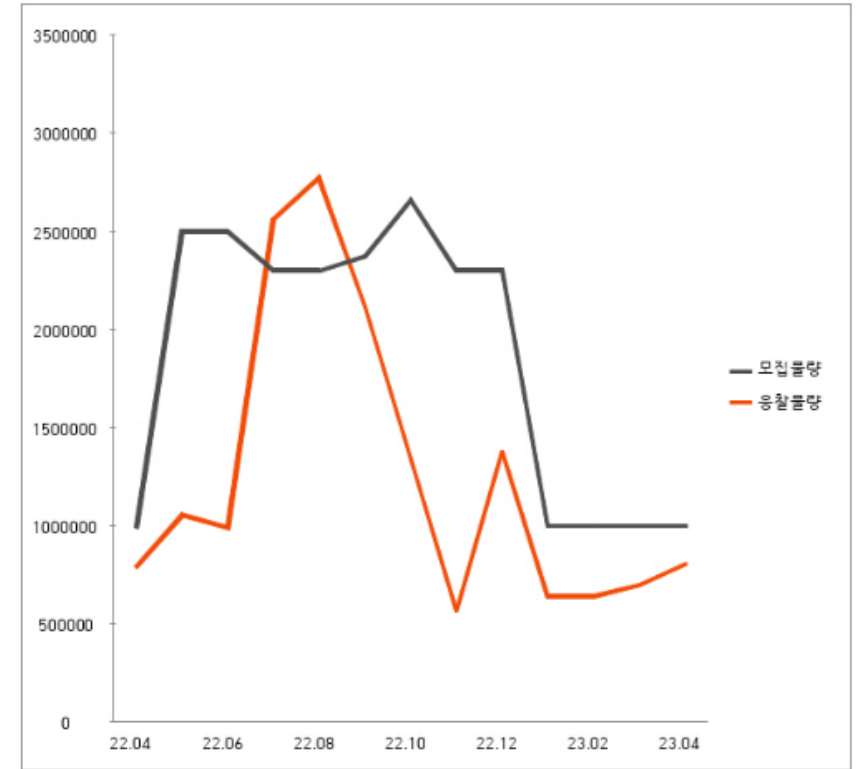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했던 정부는 기업이 배출권 잉여분과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는 유상할당 비율을 2기 3%, 3기 10%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배출권을 적게 책정한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고, 반대로 배출권을 너무 넉넉히 발행하면 시장에는 가격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

EU에서도 초기에 배출권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2006년 4월 급락 사태를 겪었다. 가격이 0원에 수렴한 적도 있었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급등락과 수익 수단 악용 등을 막기 위해 경매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조정, 최저거래가격제, 비축한 배출권 공급 등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에 제한도 두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특정 기업이 이를 탄소배출에 쓰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 이월을 막은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한국거래소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고 현재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2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참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EU 배출권 시장은 할당대상업체보다 금융기관, 개인 등 제3자의 참여 규모가 월등히 크며 현물보다 선물시장의 규모가 크다. 2020년 국내 할당배출권 평균 가격은 1만 8510원 정도로 EU 배출권(약 11만 6540원)의 10분의 1수준이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인기 '시들'...온실가스 줄인 산업계 속앓이

- 무상 배출권 과잉 할당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현재 배출권이 남아도는 상황
- 배출권을 많이 확보한 산업계는 잉여 배출권 처분에 '속앓이' 중이다.
-
- 현 배출권 거래제는 3기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
-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10%는 유상으로 할당
-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는 2기 3%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경기 부진 영향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무상할당 배출권도 충분하여 배출권 유상 구입 수요가 감소
- 시장에서는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 다른 한편으론 정부 배출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모집물량 및 응찰물량 현황(2022.04~2023.04) (단위: 톤) 자료=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결국 2026년부터 시행될 4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2023.9.20

탄소국경조정제도



<https://youtu.be/ffrgjd0Se60?si=1KxW-IFFMgPC-ltH&t=40>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2021. 7.14.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Fit for 55' 발표
 - EU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함
 -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 2022.12 도입 합의. 2023.4 최종 승인
- EU 역내 기업에 탄소세 부과함에 따라 가격 상승
 -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 부과
 -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2025년까지 시범기간(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
 - EU는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계획- 2026년 2.5%로 시작, 2034년 완전 폐지 목표

국내기업에의 영향?

- 특히 철강업계의 부담 가중 예상 → 다른 품목보다 탄소배출이 많고, EU 수출액도 압도적으로 높음
 - ✓ EU 대상 철강제품은 국내 총 수출액의 8.1%에 해당
 - ✓ 과거 3년간 한국이 EU로 수출한 탄소국경세 대상 철강제품의 평균 수출액은 27억6300만 달러(약 3조6604억원) (한국무역협회) → EU는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
 - ✓ CBAM 인증서 구매에 연 2583억 원 소요 예상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내 정부 대응상황
 - ✓ 정부 주도 태스크포스(TF) 팀 구성하여 민관이 EU 탄소국경세 이슈에 합동 대응
 - ✓ EU와 협의중 : 이행법안 발표 이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
-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 2024년 말까지는 EU의 산정 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방침

- ✓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3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계의 대응상황

- ✓ 획기적인 탄소 감축 공정이 도입되지 않는 한 막대한 탄소세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분위기

- ✓ 기업별 노력상황

- 포스코: 2023. 8월부터 사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고 2050년까지 기존 탄소기반 제철설비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 방침. 수소환원제철법인 '하이렉스' 기술을 활용해 2033년까지 350만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한다는 계획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제품을 공급한다는 목표.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 기술 적용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 탄소배출량은 철강업종 전체의 2%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기존 대비 10%의 탄소 배출 추가 절감을 목표로 친환경 지속 성장 전략을 추진. 철 스크랩 예열 및 장입 방식 개선 등으로 에코아크 전기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하이퍼 전기로 기술 완성. 총 125억원을 투자해 포항공장 3개동 지붕 5만평에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설치 완료

ESG 공시 규제

ESG 공시 규제 강화 – EU Green Taxonomy

–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ESG 공시 규제 확정 – SEC (2024.3.6)

- 민주당 3인 찬성, 공화당 2인 반대로 가결
→ 공화당 주도 주 및 기업단체 반발/ 환경단체는 제정은 찬성하나 내용 비판
- 대기업에 한해 Scope1, 2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은 제외 → 대상 기업 약 2,800개 상장기업

재무제표 주식*		정기보고서				
		기후 관련 **	지출 및 재무적 영향 **	Scope 1, 2	인증 (limited)	인증 (Reasonable)
상장대기업 (시가총액 \$7억 이상)	25년 (26년 공시)	25년 (26년 공시)	26년 (27년 공시)	26년 (27년 공시)	29년 (30년 공시)	33년 (34년 공시)
상장 중견.소기업 (\$2.5억~7억)	26년 (27년 공시)	26년 (27년 공시)	27년 (28년 공시)	28년 (29년 공시)	31년 (32년 공시)	N/A
소규모 기업	27년 (28년 공시)	27년 (28년 공시)	28년 (29년 공시)	N/A	N/A	N/A

ESG 공시 규제 확정 – SEC (2024.3.6)

(*) 재무제표 주석 내용

- 심각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화된 원가(Capitalized cost), 비용화된 지출(Expenditures expensed), 수수료(Charges) 및 손실(loss)과 관련된 정보, 해당 비용과 관련된 모든 회수액
- 이 때 자본화된 원가와 수수료는 영향의 절대값이 자본총계의 1% 이상이며 \$50만 이상인 경우, 비용 및 손실은 세전 손익 절대값의 1% 이상이며 \$10만 이상인 경우 공시

(*) 정기보고서 기후 및 재무적 영향 공시 내용

- 기업의 경영 전략, 실적, 재무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리스크
- 기후 리스크 대응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시나리오 분석, 탈탄소 전환 계획 등 기후 대응 경영 전략
-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후 감독 및 리스크 관리
- 기후 리스크 식별, 평가, 관리 프로세스
- 극한의 기후 현상 및 재해로 인해 소모된 비용
- 탄소 상쇄 및 재생 에너지 인증서에 투자된 비용

- Scope3 보고 제외 → 로이터 “로비에 나섰던 기업과 기업단체의 승리” *
- 그러나,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므로 기업 부담 큼

* 단, 캘리포니아주는 매출 10억달러 초과 기업 대상 scope3 공개 의무화. 단, 2030년까지 면책조항 적용

한국- 대기업 2026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 ✓ 2025년 :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
→ 2026년으로 유예 (2023.10)
 - ✓ 2030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 ✓ 2019년 :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
 - ✓ 2026년: 모든 유가증권 상장사
- 기업은 새로운 기회로 삼아 도약 필요
 - ✓ 선진국의 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펀드의 ESG 투자 확대와 함께 한국 기업도 ESG 경영으로 재편 필요
 - ✓ ESG 시장 확대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산 2조원 이상 (시행중)	2021년	자율공시 (시행중)	
자산 1조원 이상 (시행중)	2022년		
자산 500억 이상	2024년		
전체 유가증권 상장 법인	2026년	자산 2조 이상	
	2030년 (기존 계획)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2021년 11월 설립
- 공개초안 발표 (2021.3)
 -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에 기반
 - ✓ S1 :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관련 일반 요구사항
 - ✓ S2 :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
- 2023 6월 확정안 발표
- 한국 대응
 - ✓ 한국회계기준원(KAI)에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설립
 - ✓ IFRS S1, S2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
 - ✓ 일부 기업은 이미 IFRS S1, S2 조기도입 준비

ESG에 대한 비판

ESG 비판 – 이론적 배경

ESG 비판론 –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이슈

ESG의 실효성, ESG 평가
의 일관성/신뢰성, ESG와
재무성과간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 제기

**“ESG should be boiled down to one
simple measure: emissions
Three letters that won’t save the
planet”**

Economist, Jul 21st
2022

Energedata, 2023

ESG 관련 소송 급증

[해외 ESG 트렌드] 2023년, ,그린워싱' 넘어 ,그린허싱'을 아시나요?

- 스위스 다보스서 닷새 동안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행사에서 기업 CEO들은 ESG 경영의 애로를 호소하며 그린허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유행.
- '그린허싱'이란 기업의 ESG 녹색 경영 자격 및 진위 여부를 의도적으로 ,쉬쉬(hush)'하는 경영 결정을 뜻하는 새 개념.
- 글로벌 기업 1,200곳 대상 설문 조사 – 응답한 기업 리더의 3분의 1은 ESG 경영 관련 홍보를 아예 안 할 방침이라 대답 (South Pole, 2022년 넷제로 보고서).
- 기업 최고경영자들 중 95%는 ESG 경영의 당위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수 비즈니스 관행임을 익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중 84%는 중단기적 영업 목표를 위해서는 부득이 환경보다 이윤이 우선된 경영 결정을 내리겠다고 응답 (Software AG Research, 2023.1.19.).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에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해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최종 회의를 열고 .. 기존 '정기 ESG 평가 등급이 하락한 사안'을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을 수용했다. 정기 ESG 평가는 본래 취지대로 내부 기금 운용에만 활용된다. 기존 정기 ESG 평가의 경우 지표 자체가 58개로 방대하고 모호해 중점관리사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리스크를 '핀셋'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변화·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용어와 기준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선 여부 판단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기준인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중복되는 문제도 해소했다.

미국선 '연기금 ESG 투자' 바이든·공화당 힘겨루기

2023.03.03 국민일보

미국에선 연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놓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ESG 투자에 부정적인 공화당은 1일(현지시간) 연기금의 ESG 투자를 막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일부 주에서는 과도한 ESG 열풍에 반발 움직임

- ✓아이다호주 ESG 투자제한법 발표 (2022.7)
- ✓텍사스주 ESG투자 주도 10개 금융기관(블랙록, ubs등) 및 384개 투자펀드 제재 (2022.8)
- ✓스트라이브 자산운용: Anti-ESG Fund 출시 (2022.8)
- ✓루지애나주 블랙록에 대한 모든 투자철회 선언(2022. 9)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2022년 주주서한 발송..."이해관계자가 자본주의의 힘"

2022.1.18 ESG경제

"기업이 번영하기 위해 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힘" "대다수 이해관계자가 기업이 경제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차 촉구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단기와 중기,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투자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한 직원들과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며 "이직률이 낮고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래리 핑크 회장은 "지속가능 투자를 위해 석유와 가스 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탄소집약적인 기업의 사업 전환도 탈탄소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이 고객에게 중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기업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게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자 ESG 투자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 찬성과 반대파 양측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의견 하향 조정의 수모까지 겪게 됐다. UBS는 최근 블랙록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700달러에서 585달러로 크게 낮췄다. 블랙록의 ESG 투자 전략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월말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9조6000억원으로 세계 최대인 블랙록은 환경단체와 미국 공화당 양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0개 주 법무장관이 ESG 투자 정책을 비판... 모두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의 법무장관들로 블랙록에 위탁한 자금 회수를 언급하며 위협을 가하고 블랙록의 ESG 투자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후 활동가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블랙록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비판.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블랙록 투자 전략이 뉴욕시 연기금의 기후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뉴욕시 3개 연금의 자산은 430억 달러에 달한다. 랜더스 감사원장은 블랙록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 달성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 정례화한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싸늘해진 ESG채권 열풍.. 일반기업들 발뺀다

2023.03.05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열풍처럼 불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채권 발행이 지난해 급박한 긴축정책과 함께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기준 ESG 발행 잔액은 207조3596억원으로 올해 초 잔액 대비 1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작년 동일 기간 6조2546억원 규모로 증가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엔데믹 국면에서 금리 불확실성이 증대된 여파가 컸다. 한신평은 "이에 발행사나 투자자 모두 ESG채권에 대한 발행 여력과 투자 심리가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ESG채권 유형별 발행실적 단위: 원

자료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세그먼트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녹색채권	6000억	1조 4700억	9600억	12조 4590억	5조 8610억
사회적채권	3000억	1조 8900억	4조 3200억	27조 3955억	30조 4674억
지속가능채권	3500억	1조 7500억	3조 6900억	12조 4490억	5조 9470억
계(MBS 제외)	1조 2500억	5조 1100억	8조 9700억	52조 3035억	42조 2754억
KHFC MBS	0	20조 5773억	46조 5516억	34조 4474억	14조 9450억
총계 (MBS 포함)	1조 2500억	25조 6873억	55조 5216억	86조 7510억	57조 2204억

한신평은 부실한 사후보고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사후보고와 관련해서 일부 금융사의 경우 조달 자금을 배분한 환경, 사회 프로젝트는 기재했으나 각각의 프로젝트별 자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ESG에 대한 선호도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들은 여전히 ESG를 중요시

국제적 논의 및 규제는 현실

- 저탄소 국제사회와의 진전, 관련 공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

→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대응이 필수적

→ 환경 규제 및 공시제도에 대한 대비 필요

→ 중요하지만 측정이 어려운 무형의 비 재무적 요소 가치 계산 필요

“ESG 전문가 모셔라”... 재계, 인력확보 쟁탈전 치열

2022-06-09 뉴데일리 경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재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ESG 전문가는 찾기 힘들어 기업 간 인력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출발이 늦다보니 인재 수급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 과거 기업들이 사업장별로 직원들의 환경과 안전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ESG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SG 전담조직을 꾸리는가 하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식이다. ESG에 회의적인 기업들까지도 전문가 고용을 늘리고 있어 업계 전반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히 철강이나 화학 분야 출신의 ESG 인력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 연봉을 20~30% 얹어주겠다며 이직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철강·화학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만큼 선제적으로 ESG 경영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이나 친환경 기술개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ESG가운데서도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글로벌 투자유치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86개사의 81.4%가 작년 대비 올해 ESG 사업예산과 인력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ESG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채용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SG 정보와 관련 다양한 공시규제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 영입 경쟁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